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1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1) : 일과 삶의 균형과 국민정신건강 보장	분	야 보건복지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안녕한 삶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안녕한 삶’은 국민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헌법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형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 평범한 국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존엄성 훼손, 정신적 위기, 혐오의 확산, 개인의 고립,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여전하다.</p> <p>특히 ‘일과 직장’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불균형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총행복’ 지표의 도입과 공공 정책 실현을 통해 좋은 삶(well-being)을 실현해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공공기관 주4일 기반 유연근무제, 민간기업 주4일 인증제 도입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감소 우려와 공백 보완 <p><input type="checkbox"/> 국민정신건강 접근권 및 심리치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 단축(10년 중 1회→3년 중 1회) - 보건소·학교·군대 등 공공기관에 정신건강 전문의료인 배치 - 중독성질환 치료보호기관과 국공립 트라우마 센터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2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2) : 공동체 돌봄과 사회적 포용 증대	분	야 보건복지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안녕한 삶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청소년과 노인 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높은 자살률은 생애주기의 시작과 끝이 모두 불행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로 응답하고 있다. 일상을 지켜주는 울타리로서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해 이 땅에 사는 모두가 행복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공동체 돌봄과 활력을 위한 사회동반자 관계의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3년, 부모소득 3년 보장 및 마을공동육아 활성화 -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 지원 - 1인 가구 지원정책을 강화, 생활공유의 공적공간 확대 <p><input type="checkbox"/> 초고령사회 대비를 통한 행복한 노후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의 정부 책임 명시 - 지역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해 살던 곳에서의 행복한 노년 보장 -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돌봄의 디지털화 촉진 <p><input type="checkbox"/> 다양성 보호와 공존을 위한 혐오·차별 대책 법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 방지 및 갈등조정 강화 - 다문화·이주민 지원 및 인권 보호 정책 확대 - 언론·기업 혐오책임 징벌적배상제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3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1) :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전략과 재분배	분	야 재정경제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균형경제지표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균형경제’는 GDP 성장을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척도로 삼았던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을 ‘분배정의와 분산형 경제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정경유착의 관행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지배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이익분배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선진국 따라하기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동력을 발목 잡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는 줄어든다는 ‘낙수효과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다.</p> <p>균형경제는 경제적 부와 안전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와 대한민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선’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태적 한계선’의 균형 안에서의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이 새로운 미래 경제 전략의 목표이다.</p> <p><input type="checkbox"/> 균형경제지표에 기초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전략2050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형 경제 기반의 국가산업전략추진법 제정 - 한국형 사회적기초지표 마련 - 한국형 생태적한계지표 마련 <p><input type="checkbox"/>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소득·기초자산·기본주거·기본교육 보편복지를 위한 보편증세 -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고위 공직자 임금 조정(OECD 평균 수준) - 공시가격 제도 폐지·부동산 시가평가제 도입, 주택임대소득 정상과세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4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2) : 디지털·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경제	분	야 재정경제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균형경제지표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저성장 국면의 대한민국에서 좁은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재생에너지 체제 전환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비파괴적이고 순환 가능한 균형경제 체제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안정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강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한 분산형 경제구조로의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원천기술개발 지원으로 산업영역 확장 - 사회안전망 기반의 노동안정유연성 제고 - 재벌개혁·공정거래법 강화 <p><input type="checkbox"/> 디지털경제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산업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형 네트워크' 에너지-미래산업 기반 기업경쟁력에 투자 -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 혁신 추진 - 포괄적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산업인프라 구축 <p><input type="checkbox"/>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교육(창조력·생태친화성·디지털화)으로 교육체계 재구성 - 진학·취업 등 이행과정의 자기 탐색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 특성화 대학 육성으로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해소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5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1) : 국민주권 개헌과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	분	야 정치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협치정부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협치정부’는 국가통치에서 ① 연합정부체제 ②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③ 다당제와 자치분권제 ④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제도화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다수의 지배적 통치’ 보다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국가적·국제적 정치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다원화된 국민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p> <p>협치정부는 ① 시민참여와 노동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② 권력구조 · 선거제도 · 정당체제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구조’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③ 공공의 권력 · 자원 · 정보의 독점과 편중을 분권과 자치화의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p> <p><input type="checkbox"/> 헌법개정(기본권·자치·분권·협치)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국민주권 확대 - 선거제도 비례성과 지방자치 확대 - 불평등해소·경제민주화 확대 <p><input type="checkbox"/> 시민참여·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법·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예산·공론화 제도 강화 및 시민의회 적극 도입 - ‘노사공동결정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 촉진을 법제화 - 시민 참여의 제도화(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6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2) : 정치개혁과 디지털 민주주의 확대	분	야 정치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협치정부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 정착은 소통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는 정부 교체나 의회 구성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 문제 등 국경을 넘는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다수 국민의 합의된 의사가 더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p> <p>□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도입 추진 - 국회의원 세비 제한, 비례의석 확대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 완성 -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개정으로 참정권과 정당참여 확대 <p>□ 지방 자치와 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전면적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개혁(행정권·재정권 확대) - 동장직선제·주민참여예산 확대 - 지방조례 주민발의제 보완 및 확대 <p>□ 정보 기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본권 보장(정보접근·정보공개) - 데이터 기본권 도입으로 무료데이터 제공 확대 - 다국적기업 등 대상으로 데이터세 도입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7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1) : 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	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미래당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한국은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과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한국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쟁 위험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적이다.

전쟁과 분단의 100년이 지나기 전에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는 ①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기반의 조성을 먼저 달성해야 하며 ②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을 실현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문화 영역에서 한류네트워크' 기반이 중요하다.

전쟁종식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 한반도 종전선언 비준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UN결의안 채택

핵 없는 한반도 만들기와 점진적 모병제 추진

- 북한의 즉각적인 '핵 동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촉진
- 한반도 비핵화와 점진적 군비감축·모병제 동시 추진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8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2) :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세계 평화	분	야 통일외교통상

○ 목 표

- 미래당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한다.

○ 이행방법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세계 대전의 향배를 향한 도화선에 불이 붙고 신냉전 체제로의 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분단, 갈등과 분쟁의 상징이던 한반도에서 가장 극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일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대한 가장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을 온전히 누리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 남북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추진

-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남북한 경제협력 복원
- 경제적 남북교통망(철도·도로) 복원
- 남북한 포괄적 경제공동체 협약 체결

□ 한류네트워크 기반의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추진

- 한중일 문화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사무국 한국 유치
- K-ASEAN 경제협력으로 외교·통상 다원화 및 다각화
- K-유라시아국가와 협력 증대로 국익외교 역량 강화

□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의 책임과 기여 강화

- 국제개발협력기금(ODA) 1% 초과 달성 추진
- 한중일평화시민네트워크 확대
- UN·국제기구 참여·기여 확대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9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1) :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 인프라 확대	분 야	환경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정의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화석에너지(석유·석탄·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이라는 높은 탄소 배출과 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 환경오염 · 자원고갈 ·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p> <p>더 이상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기후약당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국가’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①전환(에너지)·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 쓰레기처리와 식량자급 분야에서 생태친화적 국가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재편에 따르는 좌초자산 전환 계획과 탄소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공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탄소배출 50%감축 법제화 - 전면적 기후변화영향평가제 도입 - 탄소세·기후정의배당제 도입 <p><input type="checkbox"/>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전면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재생에너지 교통 확대 및 대중교통 무상화 추진 - 내연기관 교통수단 규제 강화 - 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제 의무화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미래당		
정책번호 10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2) : 재생에너지 기반 순환경제로의 전환	분 야	환경
<p>○ 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정의 정책을 추진한다. <p>○ 이행방법</p> <p>COVID-19 백신 부족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겪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기후위기는 식량생산 감소로 이어져 자국 우선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화석연료와 우라늄 같은 수입 에너지원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식량 자급을 목표로 생태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자원순환 시스템을 강화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여 변화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가동 중단 - 시민참여 에너지효율화·RE100 지원 - 양방향 전력계통 활성화 촉진 <p><input type="checkbox"/>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달성 - 수리권·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축 -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인센티브 및 퇴비화 지원 <p><input type="checkbox"/>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지정 및 생태농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지원 확대 - 생태농업·친환경급식·채식선택권 확대 - 2050년 식량자급률 100% 초과 달성 			